



주간통일정세 2011-41(2011.10.03~10.0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4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 단천항 건설현장 등 3곳 현지지도(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천항 건설장을 비롯해 함경남도에 있는 사업장 3곳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단천항 건설장을 둘러보며 "지난 시기 검덕, 단천지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자동차와 열차로 여러 번 이적하면서 멀리 떨어진 항들로 옮기던 불합리한 수송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며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견인불발의 의지가 안아온(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박도춘·태중수 당비서,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곽범기 등이 수행

- **北김영남, 中공산당 대표단에 우의 강조(10/4, 신화통신)**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귀성쿤(郭聲琨)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서기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간 우의를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
 - 김 상임위원장은 "북·중 간 우의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려는 게 노동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는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양국 국민의 공통 이익에도 맞는다"고 강조하며, "1년 새 네 차례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그를 통한 양국 지도자들 간의 역사적 회동으로 우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갔다"며 "중국이 공산당의 영도 아래 더 많은 업적을 이룩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귀 서기는 "중·북 양국의 우호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세대의 노력으로 더 강고해져 가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몇 년간 빈번한 고위층 교류, 경제·무역 심화, 문화 교류 및 전략적 협력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화답

- **北매체, 南에 4주년 맞은 10·4선언 이행 촉구(10/4, 노동신문)**
 - 북한은 4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선언 4주년을 맞아 남한 정부에 선언의 이행과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0·4선언의 가치 높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대북정책의 총파산에서 교훈을 찾고 정책을 전환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
 - 이어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거나 그에 배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온 민족은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가로막는 보수패당의 반통일적 기도를 짓부셔 버려야 한다"고 주장
- **"北 신의주세관 대대적 검열...물같이"(10/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최근 북중 국경에서 최대 규모인 신의주 세관을 대대적으로 검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중국의 단둥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이 소식통은 "지난달 초부터 신의주 세관에 대한 시 당국의 자체검열에 이어 평양의 중앙당 검열 성원들까지 내려왔다"며 "세관장을 비롯해 신의주 세관원들이 대부분 교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함.
 - RFA는 신의주 세관의 대폭 개편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쇄신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함.
- **北 "대북방송은 국제법 유린 범죄행위"(10/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논평을 통해 남한의 대북방송을 겨냥, 주파수를 침범해 반공화국적 방송을 내보내는 행위는 국제법과 질서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
 - 중앙통신은 또 "이미 여러 차례 반공화국 심리모략 책동을 견어치울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계속되는 경우 그 본거지들이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역적패당은 심리모략전을 통해 우리 인민의 불만을 조성해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주의 제도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고 주장
- **北총리, 평양남새·화초 연구소 시찰(10/6, 조선중앙통신)**
 -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가 5일 평양남새(채소)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구 온실건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함.
 - 두 연구소는 지난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했던 곳임.
- **김정일, 평남 합성가죽공장 등 현지지도(10/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안남도 평성 합성가죽공장과 락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7일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비서,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수행
 - 평성 합성가죽공장에서는 안정수 경공업상과 리병룡 평성시당 책임비서, 락랑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공장에서는 조영철 식료일용품공업상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함.
 - 김 위원장은 합성가죽공장을 돌아본 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질 좋은 신발과 가방, 혁대, 점퍼, 벽지 등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 北 "해상침범·빠라살포에 최종통고" 위협(10/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의 우리 군부대 훈련과 시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도발행위가 계속될 경우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협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남북장령급(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이날 남측의 '해상침범'과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상 공공연한 전쟁행위라는 내용의 경고통지문을 남측에 보냈다고 전함.
 - 통신은 "대표단 단장은 경고통지문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이 도를 넘어 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남측은 조성된 사태를 똑바로 보고 화해와 협력이나, 물리적 대결이나 하는 심각한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함.
 - 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측의 계속되는 도발적인 전쟁행위에 부득불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으며 그에 따른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남측은 우리 군대의 최종통고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임.
- 北, 핵실험 5주년... '역사적 사변' 자평(10/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6년 10월9일에 실시된 제1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린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
 - 조선중앙방송은 9일 핵실험 5주년을 맞아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김성원 부교수, 강좌장 유흥배 부교수를 불러 대담을 진행했으며, 이들은 방송에서 "현대과학의 집합체인 핵실험을 100%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그것도 안전하게 성공했다"며 "과학자들의 가슴마다 민족적인 자부심이 세차게 끓어번졌다"고 당시를 회상함.
 - 이들은 또 1차 핵실험 이후 지난 5년간의 과학적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연구 성과를 이룩했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지난 한 해 동



안은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의 장쾌한 폭포를 안아오고 CNC(컴퓨터수치제어)기술의 명맥을 틀어쥔 것을 비롯해 수많은 기적이 창조됐다"고 강조

■ 김정일동향

- 김정일, 咸鏡南道 단천항 건설장·단천마그네사공장·용전과수농장 현지지도(10/4, 중통)
- 김정일, 平南 '평성합성가죽공장'과 개건 현대화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현지지도(10/7, 중통·중·평방)
- 김정일, '중앙양묘장'(평양시 교외)과 새로 건설된 '태양열설비센터'(평양시 만경대지구) 현지지도(10/9, 중통)
 - 김정은(黨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문경덕(黨비서), 주규창(黨부장), 리룡하(黨제1부부장)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北 개천절 기념행사, 10.3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류미영(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천도교청우당 위원장), 강련학(『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등 참석下 단군릉 앞에서 진행(10/3, 중통)
- 김영남, 10.3 中 공산당 대표단(귀성쿤' 광시장족자치구위원회 서기)과 담화(10/3, 중통)
- 박의춘 외무상, 10.3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駐北 쿠바 신임특명전권대사와 담화(10/3, 중통)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10.4 新任 駐北 쿠바 대사와 담화(10/4,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10.5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 온실 건설장 현지요해(10/6, 중통)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10.6 국제탁구연맹 위원장('아담 샤라라') 일행과 담화(10/6, 중통)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0.6 駐北 시리아 임시대리대사와 담화(10/6, 중통)
- 박의춘(외무상), 10.6 駐北 튀니지공화국 신임대사와 담화(10/6, 중통)
- 김정일의 "유일사상체계·유일적 영도체계 수립 등 黨 강화발전" 청송 및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될 것" 선동(10/7, 중통)



나. 경제

- **WFP-FAO, 北 농작물 수확량 조사 착수(10/3, 미국의소리(VO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북한에서 농작물 수확량을 평가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전함.
 - 이 방송은 WFP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인용해 북한당국의 초청으로 WFP, FAO 소속 전문가들이 3~17일 황해도를 북한의 9개 도, 29개 군을 찾아 '작황과 식량안보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힘.
 - 이번 조사는 북한의 주요 곡물과 가축 현황 등 올해의 식량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 부족분을 얼마나 메울 수 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WFP는 덧붙임.
 - 조사에 참여하는 FAO 로마본부의 키산 군살 박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흉수로 작물 수확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집중호우를 겪지 않은 지역에서는 풍부한 비가 작물 생장에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고 설명
 - WFP 측은 유럽연합이 지원한 5천5백t의 밀이 최근 북한에 도착했고, 북한 주재 인도 대사가 지난달 14일 평양 외곽의 보육원과 병원을 방문 해 인도가 지원한 식량의 분배 현황을 점검했다고 전함.

- **"北류경호텔 내년 4월 지상25층까지 오픈 계획"(10/4, 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 4월 105층(지하 4층, 지상 101층) 규모의 류경호텔을 지상 25층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북소식통은 4일 "북한이 내년 4월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에 맞춰 평양에 건설 중인 류경호텔을 지하부터 지상 25층까지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북한은 강성대국 진입을 상징하는 건물인 류경호텔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내년 4월까지 류경호텔 전층의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렵고 이용자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일부 층만 먼저 오픈해 영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류경호텔 영업을 시작하면 평양에 있는 각종 국제기구와 유럽기업의 사무소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러시아지원 식량 5만t 수령 완료(10/4,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식량을 4일까지 모두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지원물자의 종류나 양에 대한 언급 없이 "러시아 연방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조선에 제공하는 식량의 납입이 끝났다"고 전함.
 - 북한과 러시아는 4일 평양 밀가루기공공장에서 김지석 수매량정성 부상,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 러시아 비상사태성 대표단, 아브라힘 시디키 주북한 세계식량계획 임시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함.

- **"北고려항공 세계 최악 항공사"(10/4, 비즈니스인사이더)**
 - 미국 경제 전문 웹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4일(한국시각)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고려항공을 '세계 최악의 항공사'로 꼽음.
 - 이 웹사이트는 최근 고려항공을 이용한 호주인이 제공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고려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들을 평가하는 리서치 기관인 영국 스카이트랙스로부터 유일하게 '1 star' 등급을 받을 만큼 형편없는 항공사라고 혹평
 - 고려항공에 대한 평가를 항목별로 보면 승무원의 용모와 프레젠테이션, 수하물 배달, 좌석의 편안함 등에서는 별 2개 또는 3개로 평가됐지만 체크인 서비스, 환승, 비행중 엔터테인먼트, 언어능력 등 대부분 항목에서는 별 1개를 받는 데 그침.

- **"北고위층 전용 봉화진료소 확장...헬기장 신설"(10/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고위층 전용 의료시설인 봉화진료소를 확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이 방송은 2006년 11월과 지난해 10월 각각 평양 소재 봉화진료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비교하면서 기존 진료소의 북동쪽에 규모가 비슷한 신축건물이 들어섰고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까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RFA는 "지난해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봉화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력층이 늘어났다"며 "확장된 봉화진료소가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뒷받침해 줄 이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

- **中 2010년 대북 직접투자 1천200만 달러(10/5,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천2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
 - 중국 상무부 등의 '2010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액은 1천214만 달러로, 2009년(586만 달러)에 비해 배 넘게 늘어났으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8년(4천1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약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임.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1억1천만 달러이지만 2003년 112만 달러, 2004년 1천400만 달러, 2005년 650만 달러 등으로 해마다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다고 VOA는 전함.

- **윤상현 "北신권가치 2년 만에 1/100로 하락"(10/6, 연합뉴스)**
 - 지난 2009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등장한 신권의 가치가 2년 만에 100분의 1로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윤상현(한나라당) 의원이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북한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북한 원화의 환율은 30원대였지만 올해 1~2월 3천원까지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 2천700~2천800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는 북한 화폐의 가치하락에 대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정세 불안정 ▲화폐개혁 후 통화 팽창 ▲북한사회의 외화사용 빈도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
 - 윤 의원은 "북한은 애초 화폐개혁을 후계자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려고 준비했지만 계획경제체제가 애초 의도와 달리 오히려 악화하고 곡물가격 폭등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파탄 지경으로 몰리는 등 대혼란만 발생했다"고 지적
 -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북한 주민은 이미 배급이 아닌 시장에 의지해 생활하는 만큼, 대북접근의 원칙을 외부로부터의 지원에서 내부에서의 공급능력 성장에 뒤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의 우수한 제품들이 북한에서 우대 가격에 유통되는 것은 북한에도 직접적으로 득이 되는 일이며, 북한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길"이라고 말함.
- **FAO, 北곡물수확 작년比 증가 예상...440만t(10/7, FAO)**
- FAO는 7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곡물전망과 식량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도정 이후 기준)을 지난해 420만t보다 4.8% 늘어난 44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올해 쌀 수확량은 작년 240만t에서 250만t으로, 밀은 10만t에서 20만t으로 각각 늘어나고 보리, 옥수수, 콩 등의 잡곡 수확은 170만t에서 18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FAO는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이 국지적인 흉수로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꼽음.



■ 기타 (대내 경제)

- 러시아 정부의 WFP(세계식량계획)를 통한 對北 제공 식량 납입 완료에 따른 기증식, 10.4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서 진행(10/4, 중통·평방)
- 전자공업부문의 9월과 3/4분기 생산초과(110.8%·106.3%) 및 식료일용공업성(102%) 등 각기 공장-기업소들의 9월 계획 완수 보도(10/4, 중·평방)
- 평안남도 '숙천 진성피복공장(北-中 합작)' 조업식, 10.5 현지에서 진행(10/5, 중통)
 - 허태권(경공업성 부상), 최영남(진성합작회사 사장), 평중(中 상강 화성상사 총경리) 등 참가
- 北, 세계各國의 핵에너지 개발·이용 및 국가간 협력 상황 등을 거론하며 "세계가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세계적 규모의 평화적 핵에너지개발사업의 확대발전"을 전망(10/8, 중통)
- 제7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10.17~20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예정(10/8, 중통)

다. 군사

● "北, 중국군과 내년 해상 구난 합동훈련"(10/7, 도쿄신문)

- 북한이 내년 해상에서 중국군과 구조 수색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도쿄신문이 7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이 내년 구난 수색을 상정한 해상 합동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 북한이 해군의 합동 군사훈련을 강력하게 제안했을 때 한국과 미국을 의식해 소극적인 자세였으나 북한이 러시아와 해상 훈련을 추진하자 북한과의 구조 수색 합동훈련에 응함.
-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교류에 신중한 자세였으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훈련 움직임에 알고 합동훈련에 응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함.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8월 해상에서의 구조활동을 상정한 합동 군사훈련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대두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양다리 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송영선 "北, 자강도에 생화학무기 제조시설 신축"(10/7,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군 정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해 12월 북한 자강도 지역에서 생화학무기 제조를 위한 시설이 신축된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



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송 의원은 또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생물학 작용제 균체 13종 가운데 실제 무기화할 수 있는 종류가 탄저균, 보툴리눔, 천연두 등 5가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임.

라. 사회·문화

● 사라라 국제탁구연맹 회장 방북(10/5, 조선중앙통신)

- 아담 사라라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 일행이 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사라라 회장 일행의 방북 목적 및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ITTF가 11월 카타르에서 개최할 예정인 '피스앤드스포츠컵(Peace and Sports Cup)' 탁구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임.

● 자유연애 즐기고 경제능력 중시하는 北(10/5, 연합뉴스)

-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는 5일 북한의 현재 모습을 통해 통일을 조망해 보는 통일교육 교재 '꼭 알아야 할 통일·북한 110가지'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교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970년대까지 남자는 군복무, 여자는 노동력을 이유로 결혼연령이 각각 30대, 20대 중반이었지만 최근에는 여성들에게 일찍 결혼할 것을 종용하는 분위기인데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배우자 기준도 바뀌고 있으며, 과거에는 출신성분을 중시해 당·정기관의 간부나 군관이 인기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외무역 종사자, 외화벌이 일꾼이 '1등 배우자감'이고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독신여성이 증가하는 모습도 관찰됨.
- 북한 학부모의 교육열도 남쪽 못지않은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감소하자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원(교사)의 식량배급량은 물론 봉급까지 줄거나 중단된 지역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이 직접 부유층 자녀의 사교육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 교재는 소개

● 北에 성매매·불륜만연..'8·3 부부' 유행(10/9, 연합뉴스)

- 남녀관계를 '혁명적 동지애의 결합'으로 강조해왔던 북한에서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유통, 불륜 등 성(性) 문란 행위가 만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북 소식통은 9일 "경제난 장기화에 따른 당국의 주민 통제력 약화와 서구의 성문화 도입 등으로 북한에서 최근 들어 퇴폐 풍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올해 초 탈북한 함경북도 출신 주민을 인용, 북한에서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위해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



- 다고 전했으며, 최근에는 여학생들이 휴대전화 구입을 위해 매춘에 나서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불륜관계를 의미하는 이른바 '8·3 부부'가 유행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8·3'이란 1984년 8월3일 당시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공장이나 기업소 내 부산물을 활용해 생필품을 만들어 쓰라는 지시를 내린 날짜를 말하는데 이것이 점차 가짜, 사이버, 조악한 물품 등을 뜻하는 용어로 변질됐다고 뉴스는 전함.
 - 몇몇 대도시에서는 여성들이 스트립쇼를 하는 당 및 공안기관 간부 전용 주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평양시 주민이 마약 복용 후 여성들과 집단 성행위를 하다 단속됐고, 신의주에서만 매음이나 퇴폐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연평균 100여 건에 달한다는 얘기도 전해짐.
 - 이에 북한은 특히 2009년 형법 개정 시 '퇴폐적 문화 반입·보관·유포죄'를 강화해 성(性) 녹화물을 반입, 보관, 유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10.4선언」 발표 4돌 기념 '평화통일축전', 10.4 개성에서 개막식과 토론회(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체 '호소문' 채택) 및 통일음악회 진행(10/4, 평·중방·중통)
- 駐北 各國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 「10.4선언」 발표 4돌 즈음 10.4 쑥섬혁명사적지 참관 및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10/4, 중통)
- 北 민족전통음악 발표회, 10.6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진행(10/6, 중통)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공연, 10.6 咸北 청진시에서 첫 공연(10/6,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러 비상사태부 대표단 방북..식량지원 논의(10/4, 이타르타스통신)
 - 러시아 비상사태부 대표단이 자연재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이날 평양발로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비상사태부 산하 '국제 인도주의 활동 추진 및 조정국' 국장 올렉 벨리벤체프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마무리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평



양에 도착

- 러시아 대표단은 북한 농업성과 외무성 대표 등과 회담한 뒤 식량 지원 완료에 관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며, 양국은 또 북한에 대한 추가적 인도주의 지원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탈북난민 지원은 동북아 안정위한 투자"(10/5, 월스트리트저널(WSJ))

-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대규모 탈북 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 비용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투자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
- 이에 따르면 거의 모든 탈북자는 한국행을 지원해주는 나라로 가기 전 중국을 거치고 있는데, 중국은 이들을 '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제3국에 도착할 때까지 지하세계로 숨어들면서 비용 마련을 위해 저급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곧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등 범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브루킹스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간 탈북자도 25명에 불과했는데 베이징주재 미 대사관을 통해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중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
- 신문은 따라서 탈북자 지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일 뿐 아니라 22년 전 동독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탈북자 지원 비용은 앞으로 동북아시아를 안정시키기 위한 투자라고 덧붙임.

● 北 정치적 안정지수 2009년 이후 계속 하락(10/7, 미국의소리(VOA))

- 세계은행이 평가한 북한의 정치적 안정 지수가 2009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
-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전 세계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적 안정 지수는 2008년 0.47점으로 세계 상위 40% 안에 들었지만 2009년 -0.11점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10년에는 -0.45점으로 다시 하락
- 세계은행이 1996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각국의 6개 분야 통치구조 점수를 -2.5점에서 +2.5점 범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은 정부 효율성 부문의 점수가 -1.87점, 규제의 질 -2.44점, 법치는 -1.30점으로 전년보다 각각 0.06점, 0.03점, 0.05점 떨어짐.

● 美 "분배 모니터링 보장돼야 대북 식량지원"(10/8, 로이터통신)

- 미국이 북한의 식량난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지만 지원에 앞서 식량전용의 흙이 해소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 빅토리아 놀랜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통



신에 밝힘.

- 그러나 미국이 식량지원 재개를 결정하려면 먼저 북한이 식량 분배 모니터링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놀런드 대변인은 강조
- 놀런드는 "모든 결정은 인도주의 구호의 타당성과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지원 필요성, 배분 모니터링 보장 여부 등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실사단의 보고를 분석 중이며 북한의 식량 사정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中 외교관계 설정'(1949.10.6) 62돌 즈음 "조-중친선의 전통은 오늘 최고영도자들에 의해 확고히 고수발전되고 있다"며 "김정일의 訪中성과 및 불패의 친선관계는 영원할 것" 선전(10/6, 중통·민주조선)

나. 6자회담(북핵)

● 北, 미국 6자회담 전제조건 비난(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미국이 부당하게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천만부당한 조건부 타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은 회담 재개를 위해 우리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듯이 그릇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끝내 때를 놓치게 된다 해도 모든 사실자료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중앙통신은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일방적인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대화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함.
- 이어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국내정치 일정상의 고비를 넘기기 위한 땀때기식의 대화가 아닌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
- 통신은 또 "회담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면 다 같이 평등하게 전제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동시행동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촉구

● 주러 대사 위성락..새 6자수석에 임성남(10/5, 연합뉴스)

- 정부는 5일 주러시아 대사에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위성락(57)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는 또 후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과거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았



던 임성남(53) 전 주중 공사를 기용

- 임 신임 본부장은 서울 태생에 대신고-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외무고시 14회에 합격했으며 유엔 1등서기관과 주대만 대표부 참사관, 북미 3·1과장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6자회담 차석대표를 겸한 북핵외교기확단장을 맡은 데 이어 2009년 9월부터 주중 공사로 일함.

● 임성남 새 6자수석 방미.. '북미대화' 조율(10/6, 연합뉴스)

- 우리 측의 새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6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임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미국 당국자들에 대한 신임 인사를 겸해 북미 후속대화를 비롯한 향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목됨.
- 임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 후속대화 등 향후 대북대화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
- 임 본부장은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북미대화를 병용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해나가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짐.
- 외교부 당국자는 "임 본부장의 방미는 다음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문제에 관한 실무적 조율을 위한 것"이라면서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미측 관계자들과의 상견례 성격도 동시에 띠고 있다"고 설명

● 임성남 6자수석 "대북 투트랙 기초 유지할 것"(10/6, 연합뉴스)

- 우리 측의 새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기초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임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기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중요한 시점에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 기여하고 진전을 이뤘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힘.
- 그는 "전임 위성락 본부장이 의미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고 떠났다"면서 "그 토대를 잘 활용해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제 임무"라고 강조
- 그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면서 "저 역시 그런 큰 틀 아래에서 업무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후속 북미대화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걸로 안다"면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임.



3. 대남정세

● 정부 대북 수해지원 '北 무반응'으로 무산(10/4, 연합뉴스)

- 통일부는 4일 대북 수해지원 제의에 대한 북측의 무반응으로 지원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의 수해지원 의사에 북측이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아 더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원 절차를 종료한다"면서 "지원 물품이 전달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힘.
- 북측은 생필품 및 의약품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남측의 제의에 대해 식량, 시멘트, 장비 등을 통 크게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규모와 품목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북측이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일본 표류 탈북자 일행 9명 입국(10/4, 연합뉴스)

- 목선을 타고 한국으로 향하다 일본에 표류한 탈북자 9명이 4일 정오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들은 남성 3명, 여성 3명, 아동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남성 1명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동암(東岩) 백남운(白南雲)의 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들은 일본 정부의 조사와 우리 정부관계관 면담에서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이들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이들의 국내 정착은 통일부 등 유관부처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밝힘.

●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北리종혁 개성서 접촉(10/4, 연합뉴스)

-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이 지난달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장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개성사업소에서 리종혁 부위원장장과 면담하며 금강산관광 재개와 재산권 문제를 협의
- 북측이 금강산 남측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면서 지난 8월 23일 금강산지구 내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는 조치를 함에 따라 접촉 장소를 금강산이 아닌 개성공단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납북자 전담 범정부 TF 추진(10/5, 연합뉴스)

- 통일부가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전담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관계자는 5일 "납북자 문제를 전담할 TF를 통일부 내에 설치하



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안(案)이 만들어지면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이 어려워지면 통일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는 남북자 TF가 설치되면 오는 10월 임무가 종료되는 전후 남북 피해지원단 기능을 흡수할 예정이며, 이는 남북자 가운데 탈북자가 나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임.

● **北, 남하 주민 2명 · 선박 송환 요구(10/5, 연합뉴스)**

- 통일부는 5일 "북한이 동해상을 통해 어제 남하한 북한 주민 2명과 선박의 송환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오늘 오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전함.
- 북측은 통지문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즉시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박 부대변인은 "현재 2명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인들의 자유의사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

● **"남하 北주민 2명 귀순의사"..대북 통지문 발송(10/6, 연합뉴스)**

- 통일부는 5일 "북한이 동해상을 통해 어제 남하한 북한 주민 2명과 선박의 송환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오늘 오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전함.
- 북측은 통지문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즉시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박 부대변인은 "현재 2명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인들의 자유의사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

● **외통위,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결의안' 채택(10/6,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강제복송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동시에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당부하고 있음.



- 류우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배제 안 해"(10/6, 연합뉴스)
 - 류우의 통일부 장관은 6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조치 없이 남북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
 - 류 장관은 일각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의자체가 자칫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용인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냄.

- 민화협, 8차분 밀가루 300t 北에 전달(10/7,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7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한 밀가루 300t(약 1억6천만 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민화협의 이번 지원은 월드비전이 마련한 것으로, 7월26일 1차분 300t 전달 이후 여덟 번째로, 민화협은 그동안 사리원시에 밀가루 1천754t을 지원했고, 이달 말까지 총 2천500t을 전달할 계획

- "2030년 통일시 30년간 813조~2천836조원 소요"(10/7, 연합뉴스)
 -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은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0년 후인 오는 2030년 통일을 가정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는 통일 전 20년간 남북 간 공동체 형성 비용으로 79조원(GDP 대비 0.14%), 통일 후 2040년까지 10년간 통합비용으로 734조6천억~2천757조2천억 원(GDP 대비 1.7%~6.76%)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정상가격 기준임.
 - 단기형 시나리오(202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10년간 7조7천억 원, 통일 후 10년간 371조5천억~1천253조4천억 원 등 총 379조2천억~1천261조1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으며, 장기형 시나리오(204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30년간 235조원, 통일 후 10년간 765조4천억~3천42조6천억 원 등 총 1천조4천억~3천277조6천억 원이 들 것으로 나옴.
 - 통일부는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해 통일 후 1년간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통일 후 초기 1년간 비용은 단기형 27조4천억~120조1천억 원, 중기형 55조9천억~277조9천억 원, 장기형 75조1천억~298조1천억 원 등으로 조사됨.
 - 제한적이지만 통일에 대한 편익도 제시했는데,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불변가격 기준으로 통일 후 10년간 재정이전으로 인한 북한지역 편익이



90조원, 분단해소에 따른 비용절감 16조6천300억 원, 경제활성화 16조 3천600억 원, 비경제적 편익 16조2천200억 원 등 49조2천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병력 및 국방비 감축 등 국방부분 편익은 추산의 복잡성 등으로 포함되지 않음.

-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2030년 통일시 30년간 813조~2천836조원 소요"(10/7, 연합뉴스)
 - 류우의 통일부장관은 7일 오후 방한 중인 천즈리(陳志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 장관과 천 부위원장은 한중관계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미국 6자회담 전제조건 비난(10/4)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2년6개월 만에 교체되면서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미묘한 기류가 드리워지고 있음. 단순히 북핵협상 대표가 바뀌었다는 인적교체 차원을 넘어 현 정부의 대북 접근과 북핵 대응기조상의 변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 차관급인 6자회담 수석대표는 원칙적으로 청와대와 외교장관의 지시와 훈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리이지만 협상대표로서의 재량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임. 청와대와 본부가 큰 윤곽을 담은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운신의 폭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임.
- 특히 북핵 협상이 갖는 사안의 특수성상 정부 내에서 가장 정확히 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는 사실상 6자회담 수석대표뿐임. 6자회담 수석대표가 입안하는 전략과 의제설정이 정부가 큰 틀의 북핵협상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큼.
- 주목할 점은 임성남 신임 본부장이 실용을 중시하는 전략통이자 협상가라는 점임. 전임인 위성락 본부장이 상대적으로 '원칙'에 충실하면서 압박 우위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면, 임 본부장은 방법론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며 적극적 협상력을 발휘할 소지가 크다는 전망이다.
- 이러한 분석은 과거 6자회담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로 협상 진전에 기여했던 임 본부장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음. 그는 주미대사관 정무 참사관이던 2005년 6자회담 개최지인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급파'돼 9·19 공동성명의 초석을 놓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음. 또 6자회담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2007~2008년에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겸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로 활약하며 북핵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했음.
- 좀 더 시야를 넓혀볼 때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의 교체는 최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장관의 교체와 맞물려 전반적인 대북 정책기조의 전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원칙'을 중시하는 현인택 통일장관이 물러나고 '유연성'을 예고한 류우익 장관이 등장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협상대표의 교체는 시의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임.
- 특히 류 장관이 주중 대사로 재직할 당시 임 본부장은 주중 공사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양대 축인 순수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 파트



- 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대북 정책의 유연한 변화를 주도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 이 같은 협상대표의 교체는 대화국면의 한복판에 진입한 한반도 정세의 흐름과도 맞물려 주목됨. 현 정세는 지난 7월 하순 발리 남북회담-뉴욕 북미대화의 '1라운드'에 이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남북 비핵 회담이 열림으로써 '2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국면임.
 - 지금까지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셈임. 특히 현재 모색되는 북미 후속대화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경우 연내 6자회담 재개도 가능하다는 관측임.
 - 이런 상황에서 한국 측의 새로운 협상대표 등장은 다른 6자회담 수석대표의 세대교체 움직임과 맞물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이런 맥락 속에서 새 6자회담 사령탑에 오른 임 본부장으로서는 이제 궤도에 오른 협상국면의 흐름을 살려가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며 6자회담을 재개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맡게 됐음. 전임 위 본부장이 북한을 남북 비핵화 회담의 장(場)으로 이끌어낸 성과를 토대로 실질적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내는 수완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 물론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교체가 당장 현재의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힘들. 신임 본부장으로서는 급격한 기초변화를 꾀하기보다는 우리 측이 취해온 투트랙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모색해보는 신중한 대응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큼. 특히 견고한 한미 공조에 터잡아 남북-북미대화를 병용해가며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임.
 -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 있는 대화' 기조를 감안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선거국면을 고려한다면 자율적 운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못한 점도 있음. 하지만 앞으로의 북미 후속대화과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협상 과정이 꼬이면서 교착국면이 조성될 경우 신임 본부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창조적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가 미국과 중국 사정에 두루 밝은 외교관이라는 점은 한국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점임. 특히 최근까지 주중 공사로 근무하며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 기류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의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임. 임 본부장이 앞으로 어떤 협상전략과 행보로 대화국면을 관리해나갈지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

● <韓 6자수석 교체..회담 재개 영향주나>(10/5)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2년6개월 만에 교체되면서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미묘한 기류가 드리워지고 있음. 단순히 북핵협상 대표가 바뀌었다는 인적교체 차원을 넘어 현 정부의 대북 접근과 북핵 대응기조상의 변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 차관급인 6자회담 수석대표는 원칙적으로 청와대와 외교장관의 지시와 훈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리이지만 협상대표로서의 재량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임. 청와대와 본부가 큰 윤곽을 담은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운신의 폭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임.
- 특히 북핵 협상이 갖는 사안의 특수성상 정부 내에서 가장 정확히 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는 사실상 6자회담 수석대표뿐임. 6자회담 수석대표가 입안하는 전략과 의제설정이 정부가 큰 틀의 북핵협상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큼.
- 주목할 점은 임성남 신임 본부장이 실용을 중시하는 전략통이자 협상가라는 점임. 전임인 위성락 본부장이 상대적으로 '원칙'에 충실하면서 압박 우위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면, 임 본부장은 방법론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며 적극적 협상력을 발휘할 소지가 크다는 전망이다.
- 이러한 분석은 과거 6자회담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로 협상 진전에 기여했던 임 본부장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음. 그는 주미대사관 정무 참사관이던 2005년 6자회담 개최지인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급파'돼 9·19 공동성명의 초석을 놓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음. 또 6자회담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2007~2008년에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겸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로 활약하며 북핵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했음.
- 좀 더 시야를 넓혀볼 때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의 교체는 최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장관의 교체와 맞물려 전반적인 대북 정책기조의 전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원칙'을 중시하는 현인택 통일장관이 물러나고 '유연성'을 예고한 류우익 장관이 등장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협상대표의 교체는 시의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임.
- 특히 류 장관이 주중 대사로 재직할 당시 임 본부장은 주중 공사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양대 축인 순수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 파트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대북 정책의 유연한 변화를 주도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 이 같은 협상대표의 교체는 대화국면의 한복판에 진입한 한반도 정세의 흐름과도 맞물려 주목됨. 현 정세는 지난 7월 하순 발리 남북회담-뉴욕 북미대화의 '라운드'에 이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남북 비핵화회담이 열림으로써 '2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국면임.
- 지금까지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셈임. 특히 현재 모색되는 북미 후속대화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경우 연내 6자회담 재개도 가능하다는 관측임.
- 이런 상황에서 한국 측의 새로운 협상대표 등장은 다른 6자회담 수석대표의 세대교체 움직임과 맞물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이런 맥락 속에서 새 6자회담 사령탑에 오른 임 본부장으로서의 이제 궤도에 오른 협상국면의 흐름을 살려가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며 6자회담을 재개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맡게 됐다. 전임 위 본부장이 북한을 남북 비핵화 회담의 장(場)으로 이끌어낸 성과를 토대로 실질적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내는 수완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 물론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교체가 당장 현재의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힘들. 신임 본부장으로서의 급격한 기초변화를 꾀하기보다는 우리 측이 취해온 투트랙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모색해보는 신중한 대응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큼. 특히 견고한 한미 공조에 터 잡아 남북-북미대화를 병용해가며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임.
-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 있는 대화' 기조를 감안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선거국면을 고려한다면 자율적 운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못한 점도 있음. 하지만 앞으로의 북미 후속대화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협상 과정이 꼬이면서 교착국면이 조성될 경우 신임 본부장으로서의 나름대로 창조적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가 미국과 중국 사정에 두루 밝은 외교관이라는 점은 한국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점임. 특히 최근까지 주중 공사로 근무하며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 기류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의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임. 임 본부장이 앞으로 어떤 협상전략과 행보로 대화국면을 관리해나갈지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

● 임성남-번즈, '북미 대화'·비핵화 현안 협의(10/7)

- 한국의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빌 번즈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미 후속대화를 포함한 북핵 현안에 대해 협의했음.
- 두 사람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드러난 북한 측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및 남북 후속대화를 언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또 오는 13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내놓을 북핵 또는 대북 메시지의 내용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현지 외교소식통은 "이번 회동은 신임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미측 관계자들의 상견례 성격"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 측은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상당히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북미대화 추진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선순환적으로 진행해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이어 클리포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도 만나 6자회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음.
- 정부내 한 소식통은 "미국 국무부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은 당분간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아닌 번즈 부장관이 관장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北 "평화적 핵개발, 이용은 합법적 권리"(10/8)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평화적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개발·이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 통신은 이날 '핵에너지(에너지) 개발·이용의 변함없는 추이'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 중국, 유럽, 인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각국의 핵에너지 개발·이용, 국가 간 핵에너지 협력 상황 등을 거론하며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 사업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더욱 확대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 통신은 이어 "아르헨티나는 이미 두 개의 핵발전소와 농축우라늄 공장을 건설했다"며 "핵에너지 이용은 긴장한(급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방도로 에너지 산업은 변함없이 발전하고 있다. 세계적인 환경보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실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또 중국이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핵에너지로 충족시킬 계획을 수립했고 네덜란드도 2015년에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분배 모니터링 보장돼야 대북 식량지원"(10/8)

- 미국이 북한의 식량난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지만 지원에 앞서 식량전용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무부 대변인은 7일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 그러나 미국이 식량지원 재개를 결정하려면 먼저 북한이 식량 분배 모니터링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눌런드 대변인은 강조했다. 눌런드는 "모든 결정은 인도주의 구호의 타당성과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지원 필요성, 배분 모니터링 보장 여부 등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실사단의 보고를 분석 중이며 북한의 식량 사정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당국에 의한 전용 의혹과 배분 모니터링 보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 2008~2009년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음. 올 들어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했다는 유엔(UN) 보고서에 따라 미국은 지원 재개를 검토 중이며 지난 5월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했음.

다. 중·북 관계

● 北김영남, 中공산당 대표단에 우의 강조(10/4)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귀성쿤(郭聲琨)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서기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간 우의를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음.



- 김 상임위원장은 "북·중 간 우의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려는 게 노동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는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양국 국민의 공통 이익에도 맞는다"고 강조했다.
- 김 상임위원장은 이어 "1년 새 네 차례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그를 통한 양국 지도자들 간의 역사적 회동으로 우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갔다"며 "중국이 공산당의 영도 아래 더 많은 업적을 이룩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귀 서기는 "중·북 양국의 우호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세대의 노력으로 더 강고해져 가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몇 년간 빈번한 고위층 교류, 경제·무역 심화, 문화 교류 및 전략적 협력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 중국 공산당 대표단은 북한 노동당의 초청으로 닷새간 북한을 방문하고서 3일 귀국했다. 대표단은 방북 기간에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장, 주체사상탑,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우의탑 등을 방문했다.

● "北, 중국군과 내년 해상 구난 합동훈련"(10/7)

- 북한이 내년 해상에서 중국군과 구조 수색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도쿄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이 내년 구난 수색을 상정한 해상 합동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 북한이 해군의 합동 군사훈련을 강력하게 제안했을 때 한국과 미국을 의식해 소극적인 자세였으나 북한이 러시아와 해상 훈련을 추진하자 북한과의 구조 수색 합동훈련에 응했다.
-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교류에 신중한 자세였으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훈련 움직임을 알고 합동훈련에 응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8월 해상에서의 구조활동을 상정한 합동 군사훈련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대두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양다리 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요청으로 지난 7월 북해함대에 소속된 훈련함대를 10년 만에 북한에 기항시킨 바 있다.

라. 러·북 관계

● 러 비상사태부 대표단 방북..식량지원 논의(10/4)

- 러시아 비상사태부 대표단이 자연재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이날 평양발로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비상사태부 산하 '국제 인도주의 활동 추진 및 조정국' 국장 올렉 벨라벤체프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마무리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평양에 도착했음.

- 러시아 대표단은 북한 농업성과 외무성 대표 등과 회담한 뒤 식량 지원 완료에 관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임. 양국은 또 북한에 대한 추가적 인도주의 지원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벨라벤체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엔 산하 기구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을 통해 북한에 6천200t의 밀가루를 지원했음. 러시아는 이외는 별도로 양자 차원에서 지난달 말까지 북한에 약 5만t의 식량을 지원한 바 있음.

마. 기 타

● "北정치범 수용소 해체" 촉구(10/7)

- 세계기독교연대(CSW) 소속 회원과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등 10여명은 6일 오후 3시(현지시간) 주영 북한대사관 앞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음. 이들은 유엔 특별보좌관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초청장을 조속히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음.
- 시위에 참가한 CSW 앤드루 존스톤 사무총장은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과 종교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북한은 하루속히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김주일 부회장은 "국제사회는 중세기 노예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국제인권연대(ICNK) 편지를 북한 대사관에 전달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오바마,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10/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음.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가까이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음.
- 오바마 대통령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우리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해 가능한 최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왔다"면서 "지체 없이 이들



- 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에 대한 초당적인 통과도 촉구했음.
- 그는 "이들 협정은 자랑스러운 세 글자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표시가 찍힌 제품들을 만드는 미 전역의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별도의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 일본에 뒤져있는 한국 내 미국 상품 점유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또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13일을 넘기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의회 통과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미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 양원 상임위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
 - 공화당은 즉각 FTA 이행법안 제출을 환영했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3개 FTA 이행법안 처리가 "하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음.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다 음주 중 FTA 이행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음.
 - FTA 이행법안은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는 TPA(무역촉진권한)의 적용을 받게 돼 최장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함.
 -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민주·공화 양당이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인준에 필요한 이견을 미리 조정하고 인준에 필요한 득표 확인도 하기 때문에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인준 과정이 큰 지장 없이 원활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한 번도 FTA 이행법안이 부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 측은 "FTA 인준 과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음.
 - 미국의 이행법안 제출로 한국 국회 내 FTA 처리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한국의 경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돼야 하는 반면 미국은 FTA 이행법안 내에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미 FTA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7년 만에 발효를 앞두게 된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임.

● 美하원 세입위, 한미FTA 법안 가결(10/6)

-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세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가결 처리했음. 데이브 캠프(공화, 미시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찬성 31표, 반대 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본격적인 의회 절차의 첫 관문인 하원 상임위



- 를 무난하게 통과했음.
-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피터 스타크(캘리포니아), 존 루이스(조지아), 로이드 더갯(텍사스), 빌 파스크렐 주니어(뉴저지), 셸리 버클리(뉴욕)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임. 함께 상정된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도 각각 24대 12, 32대 3으로 통과됐음.
 - 이날 회의에서는 샌더 레빈 민주당 간사 등 일부 의원이 콜롬비아의 노동환경 등을 문제 삼아 미·콜롬비아 FTA에 반대 견해를 밝혔으나 한국,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엄청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음.
 - 캠프 위원장은 "지난달 새로운 일자리가 전혀 창출되지 않고 실업률이 9%를 웃도는 현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들 협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음.
 - 공화당의 '떠오르는 별로 불리는 폴 라이언(위스콘신) 의원은 한국 등과의 FTA가 공식 서명 이후 무려 4년여를 끌어온 것에 언급, "법안이 이곳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면서 "이들 협정은 고민할 필요 없는 쉬운 결정(no-brainer)"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언 의원은 "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발언시간을 줄여 눈길을 끌기도 했음.
 - 같은 뉴욕 지역구의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 조지프 크롤리 의원도 "한국은 그저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비회원국 가운데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면서 한·미 FTA에 찬성 입장을 밝혔음.
 - 다만 존 라슨(민주, 코네티컷)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북한산 제품'의 수입 가능성을 제기했음. 이에 대해 팀 리프 미 무역대표부(USTR) 법무담당관은 대북제재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원은 한국 등과의 FTA 법안이 세입위를 통과하는 대로 규정상 48시간(회기 기준)이 지난 다음 주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오는 11일 하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됨. 이후 상원 재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거치면 이들 FTA 법안 처리는 최종 마무리됨.
 - 캠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처리 일정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원 재무위와 본회의 일정은 의회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 캠프 미차관보, 류우의 통일장관 예방(10/8)

- 방한 중인 커트 캠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8일 류우의 통일부 장관을 예방함. 류 장관과 캠프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만나 최근 북한 정세와 주변국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정책의 방향과 운용기조를 놓고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류 장관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처음임.
- 캠프 차관보는 지난 7일 입국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예방했으며, 같은 날 외교안보연구원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했음.

- 캠프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 외에 일본·홍콩·브루나이·태국·중국 등을 순차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차관보는 이날 오후 출국함.

나. 한·중 관계

● 中 리커창 부총리 이달 중 방한할 듯(10/3)

-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리커창(李克強 56) 부총리가 이르면 이달 중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 "한·중 고위급 인사교류 차원에서 리커창 부총리가 이달 중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미 오래전에 리 부총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 한·중 양국은 지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으며 이후 중국에서 매년 정치국 상무위원 1명이 방한하고 있음.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2008년 8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2009년 12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했음.
- 리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 서열 7위로 5세대 지도자 가운데 차기 주석으로 유력시되는 시진핑 부주석과 함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임. 그는 내년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 외통위,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결의안' 채택(10/6)

-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리커창(李克強 56) 부총리가 이르면 이달 중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 "한·중 고위급 인사교류 차원에서 리커창 부총리가 이달 중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미 오래전에 리 부총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 한·중 양국은 지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으며 이후 중국에서 매년 정치국 상무위원 1명이 방한하고 있음.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2008년 8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2009년 12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했음.
- 리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 서열 7위로 5세대 지도자 가운데 차기 주석으로 유력시되는 시진핑 부주석과 함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임. 그는 내년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 류우익, 천즈리 中전인대 부위원장 면담(10/7)

-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7일 오후 방한 중인 천즈리(陳志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 류 장관과 천 부위원장은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약 50분간 이어졌음.
- 천 부위원장은 여성으로서는 중국 내 최고위직 인사로 알려졌으며, 류 장관은 주중대사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음. 천 부위원



장은 '2011 아시아·아프리카 여성 국제콘퍼런스' 참석차 방한 중임.

다. 한·일 관계

● 日 예비교사들 광주 근현대사 현장 방문(10/3)

- 독도영유권,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놓고 한·일간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교원 양성 국립대학인 도쿄 가쿠게이(東京學藝)대 학생 10여명이 4일 광주를 방문해 한국 근현대사를 체험함.
- 학생들은 이날 일제강점기 광주학생들이 중심이 돼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과 기념탑을 방문하고 임진왜란 당시의 병장으로 활동했던 김덕령 장군 사적지인 충장사를 찾음.
- 또, 5.18 국립묘지와 역사관을 찾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고 전남대에서 열리는 '민족주의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한일학생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임.
- 1873년 설립된 도쿄 가쿠게이(東京學藝)대학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범대학으로 현재 도쿄의 초등·중등교사는 대부분 이 학교 출신임.
-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단 김재기 교수는 "일본 학생들을 가르칠 예비 교사들에게 일본이 한반도에서 자행한 잘못된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교사로서 균형잡힌 시각과 바른 자질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행사를 추진했다"고 말했음.

● 日 마에하라 등 여당 의원, 9~11일 방한(10/4)

- 독도영유권,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놓고 한·일간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교원 양성 국립대학인 도쿄 가쿠게이(東京學藝)대 학생 10여명이 4일 광주를 방문해 한국 근현대사를 체험함.
- 학생들은 이날 일제강점기 광주학생들이 중심이 돼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과 기념탑을 방문하고 임진왜란 당시의 병장으로 활동했던 김덕령 장군 사적지인 충장사를 찾음.
- 또, 5.18 국립묘지와 역사관을 찾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고 전남대에서 열리는 '민족주의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한일학생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임.
- 1873년 설립된 도쿄 가쿠게이(東京學藝)대학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범대학으로 현재 도쿄의 초등·중등교사는 대부분 이 학교 출신임.
-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단 김재기 교수는 "일본 학생들을 가르칠 예비 교사들에게 일본이 한반도에서 자행한 잘못된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교사로서 균형잡힌 시각과 바른 자질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행사를 추진했다"고 말했음.

● "日 노다 총리, 18일 방한·도서반환 검토"(10/6)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달 1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



향으로 최종 조정해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노다 총리가 18일과 19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며, 이날 방한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일정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 이 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취임후 첫 한국 방문에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을 확인하고, 일본이 돌려주기로 한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천205책의 반환도 검토하고 있음.
- 노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달 하순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공식 외국 방문은 처음임.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지난달 21일 유엔총회가 열렸던 뉴욕에서 회담한 바 있음.
- 도서반환의 경우 지난 6월 10일 발효된 한일도서협정은 협정 발효 6개월 시점인 12월 10일까지 일본이 한국에 도서를 돌려주도록 돼있음.
- 노다 총리는 한국 방문을 전후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한·일, '위안부' 문제 입장차 공식 확인(10/6)

- 한·일 양국은 6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를 공식 확인했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로 입장차이만을 재확인했음.
- 김 장관은 회담에서 겐바 외상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공식 양자협의 제안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하고 "이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자 여성 인권의 문제로 피해자 평균 연령이 86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이 대국적 결단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겐바 외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겐바 외상은 이어 "김 장관과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겐바 외상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체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우리 측의 양자협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됨.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적인 양자 현안으로 남는 동시에 다자외교 무대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 이날 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에 합의했음. 노다 총리는 18일 방한해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폭넓은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양국 외교장관은 밝혔음.



- 양국 장관은 "노다 총리의 방한을 시작으로 정상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고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등 대북 대화의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사전조치가 이행된 이후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촉구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겐바 외상은 FTA 협상의 조기 재개를 요구했으나 김 장관은 "아직은 FTA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양국이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지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국장급 협의 등 실무차원의 조율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겐바 외상은 "납치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이에 김 장관도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 양측은 이밖에 조선왕실의궤 반환과 사할린 유골봉환 등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의 후속조치 이행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日 중의원 의장 10~12일 방한(10/8)

- 요코미치 다카히로(横路孝弘)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10~12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요코미치 의장은 방한 기간에 박희태 국회의장, 이상득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6~7일 한국을 찾았고,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책조사회장 등 일본 여당 의원들도 9~11일 방한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8일 방한해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라. 미·중 관계

● <中, 美에 위안화 분쟁탓 무역전쟁 경고>(10/4)

-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 대응법안에 맞서 무역전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고율의 실업난 해결을 이유로 위안화 환율 대응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 무역전쟁의 위기를 가져오는 역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화통신은 지난 1930년 미국에서의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예로 들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 대응법안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당시 윌리스 할리, 리드 스무트 의원이 주도한



- 것으로 외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했음. 그러나 그로 인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제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미국 상품의 외국 수출 감소로 이어져 대공황의 장기화를 불렀음.
- 미 상원에서 추진 중인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 대응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미 상원은 3일 표결로 환율 저평가 대응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음.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은 중국의 '악탈적 환율정책'으로 "미국 제조업계의 경제적 건전성과 대내외적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중국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 그러나 신화통신은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가로 지정하려는 것은 보호무역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값싼' 핑계에 불과하다고 역설했음. 아울러 미국이 재정 적자와 실업률 증가라는 자국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불공평하며 현명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음.
 -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2005년 이후 위안화가 20%가량 평가절상 됐으나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적자는 여전히 커지고 있고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2일에도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마라"고 미국을 겨냥했었음.

마. 미·일 관계

● 오바마, 日 노다 총리 연내 방미 초청(10/6)

-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연내 방미를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했음.
-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미 현지시간)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떠나기 직전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노다 총리에게 연내 미국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1월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으나 간 총리가 지난달 초 퇴진하는 바람에 바통이 노다 총리에게 넘겨졌음.
- 한편 캠벨 차관보는 6일 일본에 도착한 뒤 11일까지 한국, 중국 등을 방문해 북한의 핵 문제와 다음 달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에 관해 협의함.



바. 중·일 관계

● 中 '군사시설 침범' 일본인 억류 해제(10/9)

- 중국 정부가 군사시설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억류 중이던 일본인에 대한 억류를 해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음. 허베이성 스자좡 국가안전국은 보석 상태에 있던 일본인 다카하시 사다씨에 대한 모든 강제조치를 8일부로 해제했다고 밝혔음.
- 일본 후지타건설 직원인 다카하시씨는 작년 9월 동료 3명과 함께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중국에 버린 화학무기를 회수하는 사업 수주를 준비하기 위해 허베이성을 찾아왔다가 군사지역을 침범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국에 체포됐음.
- 이후 이들이 군사지역 침범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자 중국은 일본인 직원 3명을 석방해 일본으로 돌아가게 했으나 다카하시씨는 보석 상태에서 감시를 계속하며 조사를 해왔음.
- 이 사건은 작년 다펬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잔치승(詹其雄)이 일본에 구속돼 있을 때 발생해 일각에서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음.
- 이에 따라 다카하시씨의 억류 해제에는 내년 중일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중일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중국 측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옴.

사. 중·러 관계

● 러 당국 "미사일 정보 빼내려 한 중국인 체포"(10/5)

- 러시아 정보기관이 러시아제 중거리 방공미사일 S-300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 중국인을 체포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공보실은 이날 "중국인 툰 셴윈이 자국 국가안전부의 지령을 받고 공식 대표단의 통역을 가장해 활동하면서 러시아인들로부터 S-300 미사일의 기술 및 보수 관련 문서를 입수하려다가 검거됐다"고 밝혔음.
- 러시아 당국은 돈을 받고 이 같은 스파이 활동을 한 툰이 지난해 10월 28일 체포돼 지금까지 수사를 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소련 시절인 1979년부터 실전 배치된 방공 미사일 S-300은 적의 전투기나 탄도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데 이용됨.
- 동시에 최대 100개까지의 목표물을 추적해 그 중 최대 12개의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짐. 동종의 요격 미사일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아. 기 타

● "한중일+아세안, 7일 쌀 80만t 비축 협정"(10/3)

-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ASEAN)이 쌀 80만t을 공동 비축했다가 재해를 당한 역내 국가에 지원하는 협정에 서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한중일과 아세안은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농업장관 회의를 열어 쌀 공동비축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음.
- 지진이나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재해를 당한 역내 국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내년 중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이 80만t을 확보할 예정임.
- 각국의 쌀 비축 할당량은 한중일이 15만~30만t, 아세안 10개국이 총 8만~10만t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